광주·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 2년째 표류, 왜?

"공모 기준 부담" 지자체 신청 '0건'

'건립비 절반·운영비 감당' 전남 22개 시·군 외면
복지부, 기준 수정없이 같은 공모…어린이만 피해

보건복지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자체에 건립비의 절반을 부담시키고, 운영비도 감당하도록 한 전국 일률적인 공모 기준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활을 필요로 하는 지역 어린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자체 공모에 나섰지만 참여한 시·군이 없어 최종 무산됐다. 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 등 모두 6차례의 똑같은 공모를 했으며, 시·군들도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추정 예산 156억원 가운데 전남도가 55억원(35%), 시·군이 23억원(15%)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추가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시·군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흑자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각종 첨단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절실해 자칫 사업을 맡았다가 향후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모 기준 수정 없이 2년째 같은 공모에 나서면서 사업이 늦어져 장애나 사고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지역 내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려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정부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다. 2018년 첫 번째 공모에서 대전시가, 이어 경남 창원이 선정됐으나 광주·전남권의 경우 신청 지자체가 없어 2년째 무산될 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착공할 대전 등의 사례를 보면 건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전남 각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며 "공모기준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림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전남, 12개 생산자 단체 선정

전남도는 최근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2개 생산자 단체를 선정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친환경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체 심의회 심사결과 13개 사업신청자 가운데 12개 생산자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오는 8월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추천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순천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모링가)을 비롯 나주 자연과농부들(신선채소), 광양 봉강친환경영농조합(매실), 보성 북부농협(벼), 화순 화순농협(벼), 장흥 장흥축산(벼), 해남 땅끝들녘영농조합(잡곡), 영암 세나영농조합(고구마), 영암 아모영농조합(고구마), 영광 새뜸원(새싹보리), 완도 아들래(모링가), 진도 진도벤처팜(잡곡)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소액금융지원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지원사업 '전남행복드림론'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 3451억 규모 추경 편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K-방역 육성 등 경기 부양 중점

전남도가 34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22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감소가 예상된 세입을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출 확대로 고용·일자리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 등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3386억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31억원이며, 감액 통보된 지방교부세 46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원을 차입해 보전했다.

세출예산은 크게 4개 분야로 ▲고용안정 대책 이행 및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분야 2776억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분야 36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86억원 ▲방역체계 강화, 안전진료환경 조성 등 K-방역 산업 육성 분야 105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4595억원) ▲95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희망일자리사업(420억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정주환경을 개선할 그린리모델링(212억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2083억 원) 발행 지원(171억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 7개소 구축(16억원)과 긴급복지지원(10억원), 의료원 기능보강, 방역물품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으로 짜여졌다.

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경비, 사업비 등 37억원을 절감해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2억원을 반영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의 생계지원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며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남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를 수영 대표 도시로" 2019수영 레거시 사업 박차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전국 대회 창설 등 추진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 등 후속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선수·아마추어 및 꿈나무 선수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첨단훈련설비 및 수영시설을 구축해 생활체육, 전지훈련, 전국 규모 수영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시설로, 대한민국 수영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이었던 남부대학교를 건립 부지로 확정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학교 부지 내 건축물 건립 승인 및 지상권 설정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3월과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사업비 446억원(국비 125억·시비 291억·민간 30억원)을 들여 50m 10레인, 25m 10레인의 수영풀과 연면적 1만2000㎡의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도 제출했다.

광주시는 심사결과 '인근 중복시설을 고려한 부지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문체육인 수요 등을 감안해 시설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 판정을 받고, 규모를 조정한 안을 마련해 오는 8월 행정안전부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된 안은 사업비 370억원(국비 102억·시비 238억·민간 30억원)을 투입해 25m 10레인, 25m×30m 다목적 풀장, 스포츠기념관, 첨단훈련설비 등을 갖춘 연면적 8755㎡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대한수영연맹 총회에서 2019세계수영대회 1주년을 기념해 7월 16~20일(5일간) 선수권대회, 7월25~26일(2일간)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확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10월에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고, 제1회 전국규모 광주수영 개최를 통해 광주시가 대표수영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방계약법' 대폭 손질

수의 계약 완화·보증금 인하 등 코로나19 대응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 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지방계약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도 포함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으며,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기존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